

# 전남도, 섬·바다에 3080억 투입…해양관광으로 미래 연다

섬·어촌·해양레저 56개 사업 본격 추진…정주여건 대폭 개선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보는 관광’ 서 ‘머무는 관광’ 전환 노력

전남도가 섬과 바다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해양관광 자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3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과 긴 해안선을 보유한 지역적 강점을 극대화해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의 메카로 도약하겠다는 포석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섬·어촌 개발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56개 사업에 총 30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524억원(21%) 늘었다.

올해 정부의 핵심은 ‘사람이 머무르고 다시 찾는 전남’이다. 도는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9개 사업에 183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섬 마을 LPG 시설 구축과 ‘작은 섬 공도(空島) 방지 사업’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섬 주민들을 위한 ‘어복(어촌복지) 버스’ 사업도 눈길을 끈다. 교통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마을회관에서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약 처방부터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민생 정책이다.

올해 전남도 해양 정책은 오는 9월 5일 개막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맞춰져 있다. 전남도는 박람회를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전남 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국제적 이벤트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박람회장 내 전시·체험 콘텐츠를 구체화하고 랜드마크와 섬 테마존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열리는 ‘제7회 섬의 날’ 행사를 박람회 전조전으로 활용해 대대적인 붐업을 일으킬 계획이다.

어촌 분야에서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15개 사업에 1115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어항을 정비하고 안전 시설을 확충해 어업 기반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하는 단계적 개발에 나선다.

해양레저 분야에서는 전남 바다의 패러다임을 ‘보는 관광’에서 ‘즐기고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한다. 보성에 들어설 해양복합센터를 통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 기반을 닦고,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규모를 확대해 글로벌 해양레저 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여수 일원에 총 1조 980억 원 규모의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기본 계획 수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면, 전남은 남해안권 해양관광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이 가진 가치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증명하는 메가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섬과 어촌, 해양관광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남의 바다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애당의 길 무엇인지 고민하길”…김병기에 자진탈당 요구

박수현 수석대변인 밝혀…오늘 윤리심판원 회의

이 생각하길 요청한다는 말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가능성’에 김 의원의 탈당 등이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12일로 예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와 김 의원에 대한 당내의 비상 징계 요구 목소리 등을 언급한 뒤 “그런 가능성도 모두 열려있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다면 “제명이나 탈당 등 이런 문제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 합의에 신속히 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민주당, 본회의서 2차 특검법 상정…여야 또 ‘필버 정국’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 처리 예고에 국힘 ‘내란 몰이’ 반발

우선 처리 대상에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애초 8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본회의 일정을 다소 연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전면 반대하며 필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3대 특검에 이은 종합특검은 ‘내란 몰이’를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과 전재수 의원 등 여당의 금품수수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5일부터 필버스터 대결에 다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나주 육용오리농장서 H5형 AI 항원 검출

나주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올 겨울 7번째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나주 다시면의 육용오리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 농장은 육용오리 2만7000여 마리를 사육하던 곳으로 농장주가 폐사한 개체를 발견한 후 방역당국에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고병원성으로 판명됐다.

지난 9일 기준 올 겨울 전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33건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전남에서는 나주, 영암 등지에서 총 7건이 발생했다.

전남도는 AI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 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 해당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전량 살처분 처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올해부터 행정심판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와 함께 행정심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이들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경제

적 수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이거나 영세 자영업자, 국가유공자와 유족까지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원 대상자가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국선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를 기준 9명에서 12명까지 추가 위촉했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https://simpan.go.kr/>)으로 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법안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의 동시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가 다시 강대강 대치에 들어갈 전망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저지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별도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신천지 의혹까지 통일교 특검에 포함한 것을 ‘불타기’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다만 2차 특검과 달리 통일교 특검의 경우 수사

대상 등의 문제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추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11일 나온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연말 기자회견에서 2차 종합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전망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 법안과 함께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1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는 지난 7일 두 특검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정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